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박근혜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관련 기사 3면

기술 발전과 세계화로
자본주의는
완전히 바뀌었나?

▶ 6~7 면

그리스

시리자의 집권 가능성과
반자본주의 좌파의
대안

7 면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은
자본가만 이롭게 한다

5 면

박원순의
지하철 공사 통합과
노동이사제

8~9 면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는가?

10~11 면

신은미 마녀사냥과
북한 사회 성격

3~4 면

누구의 말일까요?

“시중에서 청와대 실세들끼리 다툼다고 하는데, 청와대 진짜 실세는 진돗개.”

박근혜, 이걸 농담아십시오

“나는 토사구팽의 사냥개가 돼 스스로 숨어 지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진돗개가 돼야 겠다.”

정윤희

이래서 박근혜가 진돗개가 실세라고 했나?

“박근혜 이년!”

‘박근혜 2년 못 살겠다’ 집회에서 나온 구호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

‘땡콩 부사장’ 조현아가 ‘리먼 상무’ 사건 때 쓴 글
리먼은 봉지를 꺼서 찼겠지, 질투 났나

“독일에 영주하고 싶은 사람은 공공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독일어를 써야만 한다.”

독일 기사당(집권 기민당의 자매 정당)이 내놓은 인종차별적 문서

“우리 아기가 독일어를 못한다. 그래서 아기를 추방할까 생각 중”

독일 네티즌의 촌철살인

기자: [진보당]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결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있나.

답변: 법률적 근거는 없다. 앞으로 학계에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선임부장연구관 김정원의 공식 브리핑.
현재의 ‘창조’ 재판

“통합민주당의 해산 명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새누리당 공식 트위터, 과연 단순 오기일까?

“우리 [조국]을 위해 CIA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들은 애국자들.”

조지 부시,

미 중앙정보국(CIA)이 저지른 고문을 옹호하며

“고문이 나쁘다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문은 존재했으며 테러리스트가 입을 열게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IA를 옹호한 프랑스 파시스트 정치인 마린 르펜
역시 유류상종

입안 가득 거품을 물어 대답할 수 없을 때까지 물고문
항문 통해 물 투입하기
빗자루 손잡이를 성고문 도구로 쓰겠다고 협박하기
벌거벗긴 상태에서 구타하며 1백80시간 동안 재우지 않기
‘자녀에게 해를 입히거나, 엄마의 목을 베거나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기
한 명에게 17일 연속 고문하기 등등.
‘CIA 고문 보고서에서 드러난 잔혹한 고문 행각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김문성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희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희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보고서의 배후로 지목된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 쪽 인사들이 보고서 작성 후 정권 요직에서 줄줄이 밀려난 것이 확인됐다.

이때만 해도 정윤희와 박지만 사이에서 벌이는 측근 간 권력 다툼인 것으로 보였다.

박근혜처럼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의 정부에서는 상명하복식 권력 집중 때문에 비밀주의가 만연하고, 따라서 측근들이 월권을 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부패상이 특히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나서서 ‘보고서 내용은 찌라시고, 보고서가 유출된 게 국기 문란이고 진짜 문제’라고 사실상 정윤희 편을 들었다.

박근혜의 발언은 그대로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됐고, 검찰은 박근혜가 불러준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비호 덕분인지 정윤희는, 검찰에 불려갈 땐 국가정보원장도 통과한다는 보안검색대도 거치지 않고 위세 있게 검찰청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빨리 덮겠다는 의도였겠지만, 박근혜 스스로 측근 간 스캔들 문제를 자신이 직접 연루된 권력 스캔들로 키운 꼴이 돼 버렸다. 정윤희가 ‘진돗개가 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박근혜가 해명한답시고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한 편의 코미디였다.



박근혜 2년!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 고통전가는 대중적 불만을 키우고 있다.

또한 청와대 내 통제력에 이완 조짐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박지만 부부에 대한 1백 쪽 분량의 동향 보고서도 봄에 청와대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정윤희 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회의감이 든다”며 “언젠가는 내가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보고서 유출자로 몰린 최모 경위는 청와

대의 압박이 부당하다며 자살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40퍼센트라던 지지율이 12월 2~3째 주에는 3곳에서 3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특히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이뿐 아니다. 지금의 정치적 위기가 깊어지면, 여권에서 박근혜 세력

과 이명박 세력 간 분열이 발전할 수도 있다. 지금 이명박계는 혹시라도 박근혜가 위기 모면용으로 자신들을 속죄양 삼지 않을까 노심조사하면서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일단 우익 내 균열을 봉합하려고 종북 물리로 방향을 틀었다. 헌법 ‘죄판관’들은 당초 예상보다 선고기일을 앞당겨 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경제 위기와 통치자들의 위기감

박근혜의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대응은, 정권의 위기감을 보여 준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노동자 계급에게 본격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개 공세를 벌여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 정부는 11월부터 노동자 계급 전반을 향한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연내 개악 시도, 의료 민영화, 해고 요건 완화, 통상임금 개악 등.

그런데 역시 청와대의 분열이 발목

을 잡고 있는 듯하다. 정권 내부의 추한 균열이 드러나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칫 고통전개 드라이브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안보 위기에 겹쳐진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더욱 더 강성 우익적 본색을 강화할 것이다. 그것이 내부 균열 봉합에도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지배계급 처지에서선 고통전개의 필요성이 절박할수록 대중의 불만과 저

항을 단속할 필요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로 줄곧 강성 우파의 대변자였다.

따라서 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당 통장을 압류하고 보궐선거 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따위의 야비함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본색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리수를 동원해야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감이 크다는 것도 드러났다.

멈추지 않을 박근혜의 도발, 단호한 투쟁과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정치 위기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계급 전반을 향한 고통전개 공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런 공세가 우익만 강화시키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실 그동안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부패 인사 문제, 복지 공약 철회, 서민 증세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치 정당성은 약화돼 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대한항공 ‘땡콩 회항’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에서 보듯 반기업 정서도 상당하다.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 돌진하려는 박근혜에게 이런 상황은 상당한 난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조직 노동자 운동이 선두에 서서 (비록 방어적인 과정이었지만) 박근혜의 고통전개 공세가 쉽게 전면화하지 못하는 방어막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호각지세를 이룬 세력균형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는 도리어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자극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선진 노동자들의 정서도 이런 방향인 듯하다. 예상을 뒤엎고 한상균 후보가 1위를 한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가 좋은 증거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이 진보당 해산 결정에 위축되지 말고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만큼 단호하게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을 투쟁으로 단결시킬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 연대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전체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노동자를 단결시킬 정치가 곳곳에서 중요한 이유다.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김지윤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현재 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현재는 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그러나 현재는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현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통합진보당측 변호인), 박근혜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지 1년 만에 현재는 철저히 박근혜 정권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결정을 내렸다. 이 날 결정으로 현재가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은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고 자본가 계급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현재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기 때문에 해산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내놓은 증거라고는 이석기 의원 등이 모인 ‘RO’ 회의 석상의 발언,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 정도다.

그러나 현재가 문제 삼은 발언은 어디까지나 진보당의 일부 활동가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설사 거기에서 일부 과격한 주장이 오갔다고 해도 구체성도 없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도 없어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런 모임과

주장들은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거나 결정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토론 모임이 ‘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현재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게다가 검찰이 내란음모를 꾸렸다고 기소한 ‘RO’는 고등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선거주의

그런데도 현재는 이석기 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에 대해서도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이라고 여러 차례 규정하며 ‘이석기=내란음모세력=진보당’이라는 논리를 들이댔다. ‘RO’ 사건 최종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압력을 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든 진보당 내 자주파가 북한 추종 세력이며, 따라서 이 강령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진보당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당 방어를 위해 현재 공개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식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자주파가 혁명주의자가 아닌 선거주의자라며 이렇게 증언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로의] 강령 개정이 가리켰던 것은 민주당과 연합해서 대선을 치르고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강령을 바꿔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조



사상·토론·결사의 자유 가로막고 싶은 박근혜 정부 권영국 변호사가 현재 결정에 항의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금이라도 아는 진보진영에서는 다들 믿지 않는 얘기가. ... 강령을 바꾼 이유는 바로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

즉, 진보적 민주주의는 모종의 혁명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주의 전략에 맞춘 것이었다. 따라서 진보당 내 자주파를 모종의 혁명 세력이라 보는 것은 “1980년대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현재는 실체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심증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아마도 애초부터 현재에게 실체적 증거들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무려 17만 5천여 쪽에 달하는 증거가 제출된 재판을 1년여 만에 매듭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현재가 판결 근거라고 내세우는 “목적과 활동”은 사상과 주장을 가리킨다. 머릿속 생각을 검열하고 처벌하고 심지어 정당까지도 해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이 매우 저열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현재가 이따위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를 수차례 언급한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노릇이다.

“당선 2년 선물”

이번 결정은 박근혜 당선 2년이 되는 날,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문건 폭로와 실제 논쟁에서 촉발된 청와대 이전투 구로 박근혜는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

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40퍼센트 지지율이 무너졌다. 특히,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한 층에서도 이탈이 감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들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자신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은미, 황선 씨를 비난한 것이 반격의 신호탄이었을 것이다.

현재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찰청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처협의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현재의 결과에 무조건 따라라며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불거지자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던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도 해산 결정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 뻔하다. 박근혜는 진보당 해산을 우파 재결속의 발판으로 삼아 공무원연금 개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자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도 경제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운동 등 정치적 항의 운동과 노동자 투쟁으로 정치적 내상을 입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노동운동 진영은 이번 결정으로 위축되지 말고 박근혜의 대(對)노동자 계급 공세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김영익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신은미 (민중의소리)

게 분명한 한 고등학생이 신은미 씨에게 황선이 든 폭발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우파들이 신은미 씨를 “종북녀”라며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진보당 문제와 관련이 크다. 현재의 진보당 해산 심판선고와 대법원의 이석기 사건 판결이 눈앞에 있던 시점에, 우파들은 이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신은미·황선의 토크콘서트를 종북 논란의 불쏘시개로 써 먹었다.

‘청와대 문건’ 폭로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도 몰타기용으로 이를 이용했다. 12월 15일 박근혜는 “몇 번의 북한 방

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 자신들의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 양 왜곡·과장”한다며 신은미 씨를 비난했다.

불쏘시개

그러나 신은미 씨 등이 우파들한테 공격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었든,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우파는 신은미 씨가 북한 여행 경험을 낭만적으로 묘사한 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면, 서도,

2002년 당시 김정일을 만나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박근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와 우파들의 ‘종북’ 물이는 진보·좌파 내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어렵게 한다. 국가 탄압이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신은미 씨 등의 북한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우파의 신은미 씨 공격을 반대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김영익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북한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나라”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주최 측은 신은미 씨가 북한을 다녀 온 ‘경험’이 있음을 내세웠다. 즉,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북한을 직접 접해 본 경험을 통해 북한 사회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안내를 받는 여행만으로 북한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접근은 조야한 경험주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같은 경험에서 전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은 하나?

신은미 씨는 기행문에서 북한 여행 경험으로 그 사회에 대한 시각이 변했음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각은 냉전적 시각을 거꾸로 세운 것일 뿐이다.

“간혹 사람들이 ‘우리는 북한 정권과 북한동포를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동포들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곤 한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별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였다.”(“북한 시민혁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 <오마이뉴스>)

북한에 명백히 존재하는 계급 지배와 차별을 보지 않는 관점이다.

물론, 신은미 씨의 글에도 북한 내의 빈부격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온다. 예컨대, 보통 사람들이 가기에 너무 비싼 평양의 맥주집, 목탄차를 타



진정한 사회주의와 동떨어진 북한 북한 정권과 주민은 하나로 뭉쳐 있다는 생각은 북한의 실상과 거리가 멀다.

고 다니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벤츠 차를 타고 묘향산에 온 젊은이들 등. 신은미 씨 자신도 이런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판해 온 진보 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북한의 보통 사람들과 소수 특권층의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보통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을 때, 김정일의 아들은 수입 명품을 쓰면서 “스웨덴산 훈제 연어, 거위 간 요리, 일본의 스시와 사시미, 멜론을 곁들인

파르마 햄, 헝가리 소시지 등을 즐겼다.” 이를 두고 커밍스는 “주체의 땅에 자리잡은 포스트모던하고 코스모폴리탄한 가정”이라며 김정일 일가를 비꼬았다.《김정일 코드》

신은미 씨는 한 인터뷰에서 “[북한을 여행하면서] 인권 상황을 짐작할 만한 일을 목격하거나 들어본 적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물론 인권 문제를 빌미 삼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친미 독재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이중 잣대이자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개입으로 결국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시인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도 인정했고, 1995년에는 국제앰네스티에

반국가사범 약 2백40명이 ‘형산교화소’에 수용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9월 북한 최고재판소의 원로참사 박수종은 북한에 공개처형 제도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두고 ‘북한 인권을 중시하면 먼저 북한에 식량과 의료 지원부터 해야 한다’며 얼버무려선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식량·의료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치적·시민적 권리(예컨대, 독립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할 권리 등)도 북한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자본주의

신은미·황선의 ‘토크콘서트’는 ‘북한 바로 알기’를 강조하며 마련된 행사였다. 물론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그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토크콘서트’가 내세우는 ‘경험주의’로는 북한을 바로 알기 어렵다.

북한 체제는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고 오히려 남한처럼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이다. 산업을 국가가 소유·통제하지만, 국가를 통제하는 건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줌의 관료들이다.

북한 노동자 계급의 일부는 굶주림과 궁핍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가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군비에 쏟고 핵무기를 개발한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묘사하며 말했던 ‘한편에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 빈곤의 축적’이 북한 사회에도 꼭 맞아떨어진다. 국제 경쟁, 특히 군사 경쟁의 압박을 받아 북한 체제도 여느 자본주의와 빼닮게 된 것이다. 이런 체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다.

신은미 씨의 생각과 달리, 북한 사회에는 남북 분단보다 더 선명한 계급 분단이 놓여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과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노동자 계급이 관료 지배 계급에 맞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김재한·장호중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12월 9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이명수 등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됐다. 건강보험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된 의료 시설을 팔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 소유주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병원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필요에 따라(파산을 가장해야겠지만) 병원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병원을 판매한 자는 이익을 챙겨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대형 자본은 여러 개의 병원을 인수해 체인형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병원들의 이윤 추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리 치과들이나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체인형 치과병원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병원 소유주가 요구하는 실적을 채우거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 비용은 환자들에게 떠넘겨지거나 건강보험 재정 누출로 이어졌다.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위협에 노출된다. 이는 지금도 열악한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보다 돈 되는 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이 배정될 것이고 이는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영국 스탠포드 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영국 정부는 국가의료체계(NHS) 민영화의 일환으로 스탠포드 병원 등 일부 병원들에 재정과 병원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주는 조치를 도입했다. 스탠포드 병원은 비용을 줄이려고 기존 인력을 대폭 줄였다.

2013년에 최종 발표된 프란시스 보고서는 이런 조치로 스탠포드 병원의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경우 살 수 있었던 사람 1천2백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의료료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에도 우리 편의 뒤통수를 치고 상정에 합의해줬다. 심지어 연내 통과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승인도 이뤄졌다.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곧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저지법국민은 시급히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 등 당면한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이정원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건설 자본가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 간에 경쟁을 강요해 임금을 떨어뜨리는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 때문에 국내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이 위협받는다며 최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이용해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다.

현장 취재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은 잘못된 요구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의 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12월 16일 이른 새벽, 경기도 하남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 수도권의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과 조합원 4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건설 현장 불법 도급 폐지, 직고용 쟁취’를 내걸고 수도권 지부 공동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노동자들이 정작 한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이었다. 이들은 조를 몇 개 짜 이현장의 모든 출입구 앞에 서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골라내 출입을 막았다.

방송차에서는 “건설자본의 불법 외국인 고용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일

자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임금도 깎고 노동시간은 더욱 늘리고 각종 산업재해와 건설 현장 내의 폭력 범죄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주춤주춤하며 감히 현장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건설노조 간부는 비자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도 막았다.

결국 항의 한 번 못한 채 출근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던 한 이주노동자는 “어제도 왔다가 돌아갔다. 이 시간엔 다른 현장으로 갈 수도 없다” 하고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노동자연대 회원인 건설조합원이 “직고용 얻어 내기 위해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 하고 묻자, 한 간부는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회원인 건설조

합원은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동안 건설노조가 건설사를 상대로 직고용을 쟁취한 수많은 투쟁들에서 이런 수단은 오히려 예외적이었다.”

실제로 이 행동에 동참한 건설노조 한 조합원에게 “이 투쟁의 요구가 직고용이냐”고 묻자, 그는 “그게 아니고 불법 외국인 막는 거다” 하고 답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이주노동자 출입을 막을 뿐 아니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에 ‘외국인 불법 고용 신고’도 한다는 사실이다. 언제든 단속이 들이닥칠 빌미를 준 것이다.

심지어 지난 10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의 한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금 건설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당화한 이 행동은 순식간에 이주노동자 추방 운동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이라는 요구는 잘못된 요구다.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법 도급 시스템의 피해자들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일자리 부족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경제 위기 때문이다.

불법 도급 문제는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해 만연한 불법 도급을 폐지하는 투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단결해야 할 노동자들이다.

건설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단결 원칙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건설노조 안에는 늘 이주노동자에 대해 반감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조직해 온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反)이주노동자 분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었다.

2009~10년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는 삼환까뮤 공사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조합원팀 해고와 군포 당동 이주노동자팀 해고에 맞서 투쟁을 벌여 승리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도 2008~09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추방 운동을 벌이던 태도를 바꿔 2011년부터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돌아서면서 조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무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중서부지부 등의 활동가들이 그동안 지켜 온 노동자 계급 단결의 원칙을 훼손하며 후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내쫓는 활동을 제지하기는커녕 ‘공동 투쟁’이라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경기 중서부지부는 건설 자본가들의 조합원 고용 회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경북지부도 2012년 파업 성과를 빼앗으려는 자본가들의 반격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냉철한 현실은 하청제도가 남아 있는 한 노동자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하는 시도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상황을 돌파할 길은 건설노조 전체에서 연대를 확대해 싸워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동안 어렵게 구축하고 유지해 온 단결의 전통을 스스로 깨 버리면, 노조 내 우파들이 더 자신감을 얻는 효과만 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후퇴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주노동자 배척은 단결력 약화를 부른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내모는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건설 현장을 바꾸려면, 일단 노조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목건축 분야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전부터 조직률이 낮았다.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여러 투쟁을 벌이며 조직을 확대하고 현장의 조건을 개선해 왔다.

무엇보다 조직력을 확대하려면 이주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해 함께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2003년 용인동백지구 파업 때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연대해 3일간 현장을 멈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2011년

이주노동자 배척에서 조직화로 입장을 바꾸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노조가 투쟁할 때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일손을 놓고 노조를 도왔다. 대경지부는 지역 전체 건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내걸고 싸워 조직을 크게 확대했다. 노조가 이주노동자와 함께 투쟁해서 조합원도 늘린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존하면 불법 도급과 같은 진정한 문제는 부차화된다. 일례로 2009년 영국에서는 건설노조 지도자들이 하청제도와, 자본가들의 일자리·임금 삭감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는 논리로서 ‘영국 일자리는 영국 노동

자에게’라는 민족주의적 구호를 적극 고무한 바 있다.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면, 건설 현장 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편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파업 등을 벌여도 이주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참을 끌어낼 수 없다.

얼마 못 가 건설노조는 더욱 고립될 수 있다. 기존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조차 노조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연대와 조직화를 하면서 어렵게 쌓아 온 성과들이 물거품이 돼 버릴 수 있다.

이는 다시 조직력 약화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反)이주노동자 정서는 더욱 거세져, 건설 현장 내 노

동자들이 단결하기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인종차별을 부추겨 노동자들의 분열을 노리는 정부와 자본가들을 돕는 셈임을 봐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는 건설사가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을 빌미로 노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광주전남 지부장 등 3인을 구속했다. 자본가들은 이런 공격을 더욱 노릴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이주민을 비난하는 우익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외국인 혐오 세력을 조직할 때 건설 현장을 기반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건설노조가 벌이는 일은 단지 건설 현장 내 일자리를 둘러싼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완전히 탈바꿈했는가?

차승일

사회학자 다니엘 벨이 “탈산업 사회의 도래”(국역: 아카넷, 2006년)를 예고한 1960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논의가 성행해 왔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교수 케빈 두건은 이런 논의를 ‘신(新)자본주의론’이라고 부른다. 논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신자본주의론의 공통점은 이

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나 제도 변화로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고용관계도 질적으로 변했고,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현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즉, 이런 주장은 현실의 일면을 묘사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일반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자본주의론’의 몇몇 주장들을 실제 현실에 비춰 살펴보겠다.

‘신자본주의’ 관련 이론가들

‘신자본주의론’의 시조는 다니엘 벨이다. 1960년 그는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제 사회가 지식 중심의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속에서 전문직과 기술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자·수학자·기술관료들이 권력을 쥐게 된다는 것이다. 더 유명한 인물로는 《미래의 충격》(1970년), 《제3의 물결》(1980년) 등의 저자인 앨빈 토플러가 있다. 토플러는 별보다 훨씬 더 과감했다. 그는 ‘초산업 사회’의 도래를 말하며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대를 ‘임시성의 시대’로 규정했다. 1회용 기저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듯이 모든 것이 1회용이 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심지어 자동차나 산업 설비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지속적 관계가 사라지고 있는 데, 이런 추세가 고용관계에도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근속년수가 평균 4년이고, 그에 따라 평생 직장을 7번 바꾼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이렇게 시작된 ‘새 시대’ 논의는 1990년대에 훨씬 더 널리 퍼졌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펠 불랑스키와 이브 사펠로는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개념을 빌려 자본주의 정신이 세 시대

에 걸쳐서 발전했다고 구분한다. 첫째 시대인 19세기 말은 가족 기업 중심의 시대였다. 그때의 자본주의 정신은 가부장적인 기업주 겸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를 찬양했다. 둘째 시대인 1930~60년대에는 가족 기업들이 거대 관료 조직으로 대체됐다. 그때의 자본주의 정신은 가족 기업들의 협소한 관점과 좁범 경영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경영을 강조했다. 셋째 시대의 자본주의 정신은 거대 관료 조직이 지나는 경직성과 위계 질서 등에 반감을 보이며 수평적 조직과 경영을 강조했다. 또, 테일러주의·계획·종신고용 등을 비판하며 시장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불랑스키와 사펠로는 왜 시대에 따라 다른 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하는지 그 물질적 토대를 분석하지 않았다. ‘신자본주의’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누엘 카스텔, 세넷, 지그문트 바우만, 올리버 벵처럼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였거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인 인물들이 이 논의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다. 마이클 하트와 토니 네그로 같은 반자본주의자들도 그랬다. 이처럼 ‘신자본주의론’은 좌파와 모두에서 광범하게 받아들여졌다.

세계화의 신화와 현실

‘신자본주의론’의 또 다른 핵심 근거는 세계화다. 특히 세계화로 말미암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를 강조한다. 이 주장은 자본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져나가고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지표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이다. 그런데 흔한 가정과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에 집중돼 있다. 1980~2006년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선진국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은 56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증가했다. 1990~2003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총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한 비율은 8퍼센트밖에 안 났다.

해외투자에는 수직통합형 투자와 수평통합형 투자가 있다. 수직통합형 투자는 생산 과정(원료 생산, 중간재

조립, 완제품 조립, 판매)을 분리해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직통합형 투자의 목표는 비용 절감이다. 수평통합형 투자는 본국에서의 생산 과정을 똑같이 재현하는 형태의 투자를 말한다. 수평통합형 투자의 목표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오늘날 증가하는 해외투자의 대세는 수평통합형 투자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

‘초국적성 지수’라는 지표도 있다. 초국적성 지수는 한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총고용에서 해외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해 ‘초국적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의 초국적성 지수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해 주목해 봐야 하는 점은 교육과 의료 등 노동력 재생산 부문에서 고용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이 사회와 노동에 미치는 영향

‘신자본주의론’은 기술 혁신의 영향을 크게 보는데,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격상시켜 물신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어의 법칙’이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갑절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근거로, 전산 처리 속도의 급속한 발전 덕에 물질적 한계가 극복되고 비물질화된 지식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한다.

도서관에 있는 책 수만 권을 몇 초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다수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들이 이런 주장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이론가가 마누엘 카스텔이라는 사회학자이다. 그는 ‘네트워크 사회론’을 주장했다. 정보주의라는 새 발전양식이 등장해, 이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했다는 이론이다.

재택근무

카스텔은 산업 시대에는 경제 성장 추구가 발전 동력이었던 반면, 정보 시대에는 기술 발전 자체가 발전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지식 축적을 위한 지식 축적,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 발전이 자체로 동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 축적과 기술 발전 논리 때

문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과 관계는 모두 네트워크와 논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외주화나 팀제 근무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너무 과장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이 침대에 누워 휴대를 단발기로 빗자루를 조종해 거리를 청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밖에도 정보통신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물질적’ 노동은 많다. 금융 등 정보통신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4.9퍼센트와 3.9퍼센트밖에 안 된다.



자본은 그리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는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50퍼센트를 유지했다. 즉, 다국적기업들의 자산·매출·고용의 절반은 본국에 있다는 뜻이다. 세계화로 말미

암은 일자리 유출 공포가 가장 큰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양상도 비슷했다.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70퍼센트 이상 미국 국내에 집중돼 있다.

이런 실증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정과 해외일자리 유출론의 영향력은 크다. 특히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코넬대학교의 케이트 브론펜브레너는 기업 4백여 곳을 연구한 결과, 기업이 손쉽게 생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인식과 실직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퍼진 것이 미국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었다. 연구 대상 기업들의 사용자 중 많은 자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할 때 노조를 만들면 폐업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협박에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화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노동시장의 지속성

‘신자본주의’ 논의는 노동시장이 기술이나 제도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는 것처럼 가정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시장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면 시도의 하나로 프레드 블록의 연구가 있다. 그는 시장성이 높은 거래와 낮은 거래를 구분한다. 시장성이 높은 거래는 시도의 무리한 간섭이나 노조나 독점기업 같은 외부적 요인을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와 달리, 일부 사회학자들은 시장 자체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들어서는 칼 폴라니의 ‘착근성’ 개념을 이용해 노동시장이 여러 사회적 네트워크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밝혀 왔다.

현황이라고 보는 공통점이 있다. 전환이론은 생산 체제의 이런 변화에 맞춰 노동 시장도 유연화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론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효율적인 자기조정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외부적 개입이 없는 한 시장이 최적의 균형을 찾아간다고 가정한다. 국가의 무리한 간섭이나 노조나 독점기업 같은 외부적 요인을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와 달리, 일부 사회학자들은 시장 자체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들어서는 칼 폴라니의 ‘착근성’ 개념을 이용해 노동시장이 여러 사회적 네트워크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밝혀 왔다.

노동·자본·국가

노동시장 교유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노임 촘스키의 ‘표면 구조 대(對) 심층 구조’ 개념이 유용하다. 표면 구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가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심층 구조는 노동·자본·국가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여러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숙련 기술 확보·육성 체제, 노동과 자본의 협상 구조 등은 그 나라 산업 발전의 초창기에 생겨나 꽤나 오랫동안 지속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1918년의 격변기에

형성된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노동시장은 기술 변화나 세계화 같은 이런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름의 내적 논리와 지속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력 재생산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 보통 포스트포드주의 장 변화에서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력 재생산 부문에는 교육과 의료 등이 있다. 최근 이런 부문에서 고용이 급증했다.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 부문의 확장이 오히려 노동시장 변화에서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보건의로 부문의 확장과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 부문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또한, 노동력 공급과 재생산에서 국가가 결정적 구실을 한다는 점도 봐야 한다. 영국이 대표적 사례다. 16세기 영국 국가는 인플레이션(물가 치기)을 통해 농민을 토지에서 몰아내 임금노동자를 형성시켰다. 그리고 구빈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제했다. 19세기에는 고강도·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평균수명이 하락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며 전정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학교 급식과 연금을 도입하는 등 복지를 제공했다. 결국 자본은 노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동력 재생산 부문은 확대돼 왔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생산도구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고는, 그리하여 생산관계와 그것을 포함하는 사회관계 전체를 끊임없이 변혁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못한다. … 생산을 끊임없이 변혁하기, 사회적 조건을 모두 끊임없이 교란하기, 불안정과 동요를 지속시키기가 부르주아지의 시대를 다른 모든 시대와 구분해 준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한 이 말처럼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한다. ‘신자본주의론’이 과장하는 현실을 냉정히 살펴보면, 자본이 노동에 의존한다는 기본 전제조건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건을 모두 끊임없이 교란하기, 불안정과 동요를 지속시키기가 부르주아지의 시대를 다른 모든 시대와 구분해 준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재력이 있다. 새로운 부문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서 그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전문통역가 천경록이 Kevin Doogan, *New Capitalism? The Transformation of Work, Polity* 2009를 한 워크숍에서 요약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썼다.

녹취 김중헌

그리스

은행가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그리스에서 내년 초에 조기 총선이 실시돼 시리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의 대안이 더 중요해졌다고 파노스 기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기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SE)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현재 붕괴하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보수 신민당과 개혁주의 사회당의 연립 정부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된 후 40년간 이 두 정당이 집권했다. 이제 그들은 힘을 합쳤는데도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다.

이는 현 정치 체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 주는 증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부채가 얼마나 큰 압력을 행사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1년치 총생산량에 해당하는 돈이 오직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이자만 해도 1년치 정부 예산에 이르렀다. 그동안 그리스 국민은 막대한 희생을 치렀지만,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길 길은 요원하다.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단순히 경제 위기 탓이 아니라 저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지난 5년은 급진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광범한 그리스 대중의 반격은 사실 구제금융을 받기 전인 2008년 12월에 시작됐다. 경찰이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폴로스라는 학생을 총으로 쏜 실패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다.

세계경제 위기 시기에 일어난 첫 반란이었고, 시작이었을 뿐이다.

이후 32번의 총파업, 광장 점거, 광범한 좌경화가 뒤따랐다.

급진좌파 정당 시리아의 지지율 은 3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치솟았다.

이제 시리아가 새 대통령 선출에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새해 초에는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그리스 대선은 간선제이고 의회가 대통령 선출에 실패하면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어떤 좌파 정부도 빚을 갚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정점은 노동자 통제 문제이다.

시리아는 국영방송 ERT에서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ERT 노동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선거 당일 밤 방송국 건물을 점거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가들의 협박에 대응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장악하지 않으면, 은행가들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려 들 것이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유로존을 탈퇴하고 은행을 국유화하지는 반자본주의 좌파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3호 / 번역 최현현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다. 당시 분할의 목적은 양 공사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였고, 매우 전 투적이었던 서울지하철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깔려 있었다.

실제로 분할 이후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등의 압력을 받아 왔다. 그래서 지하철 노동자들 사이에서 통합에 대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2013년 7월 설문 조사에서 노동자 1천5백28명 중 74퍼센트가 통합에 찬성했다.)

양 공사를 통합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 하자는 노동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강화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통합 구상은 철저히 비용 절감에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인력이 9호선에 비해 현저히 많으며, “중복업무 정리, 인력 재편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말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 요구를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

도시철도의 경우 기관사 1인 승무로 자살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야간에 역사(驛舍) 1인 근무로 사고 대처가 어려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야간 근무 축소를 위한 4조2교대 도입도 더디고, 지하철 중정비 노동자들은 인원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데 말이다.

안전은 뒷전인가

서울시는 중복 업무 통합으로 남은 5백~1천 명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추가적인 충원 없이도 …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효율적으로 직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2014~17년에 양 공사에서 2천6백 명이 정년퇴직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정년퇴직 인력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인위적” 감축은 아니지만 1천6백 명이나 감소하는 셈이다.

게다가 차량 분야의 외주 노동자들은 이번 통합 과정에서 ‘직고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까지 서울메트로 경정비 외주화 노동자들을 직고용하고 정규직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대책 중 하나다.

서울시가 지하철 공사 통합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한 것도, 이들의 관심이 주로 재정 절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인상하기로 했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 요금을 더 비싸게 받고, 환승 할인

도 5회에서 3회로 줄이려 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제도로 적자가 늘어 요금 인상과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임승승 증가에 따른 적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국가 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지하철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셈이다. 서울시의 거꾸로 가는 정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를 내, 도리어 박근혜의 복지삭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 줄 뿐이다.

정치적 독립성

서울시가 비용 절감에 몰두하는 것을 볼 때, 서울지하철노조가 이번 입단협에서 사측과 ‘인위적인 인원 감축 불가, 고용안정 협약 준수’ 합의를 맺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이번 통합을 지지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발표한데다, 통합된 지하철공사에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해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독일에서 시간제 저임금 노동자가 대폭 늘고, 실질임금이 삭감됐지만, 노동이사제를 이를 막지 못했다.

이번 서울시 지하철 통합안은 박원순 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한 치적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독일 모델’을 구현해, 경제 위



사진 출처: 서울지하철노조노동자연대

비용 절감과 인력 충원·안전은 반비례한다.

기 고통을 큰 반발 없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국정 운영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성 체제에 보여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노조 활동가들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

하며,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무게중심을 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로 합쳐진 노동자들의 힘을 이용해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윤필언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강동훈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썼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 찬성했다. 아마 박원순 시장이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를 도입해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며, 경영협의회는 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노조와 협의하는 기구이다.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는 노조 경영 참여의 한 방법으로 진보진영의 일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 중 하나다. 노조의 경영 참여를 통한 “투명 경영이 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노조의 경영 참여는 실패한 사외이사제를 대신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이 벌어져 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재벌의 족벌경영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노동조합 경영 참여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를 겪으며 ‘독일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일식 경영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한겨레>는 독일 폭스바겐이 “1990년대 초반 국의 공장의 부진 등으로 구조조정의 위기에 몰렸지만, 노

사가 고용 안정과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을 교환해 위기를 탈출한 바 있다”며 독일식 경영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도 독일식 경영 참여의 주요 제도들이다. 물론 실제로 도입될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가 독일 수준의 참여를 보장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말이다.

독일식 경영 참여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노동자 경영 참여’라는 명목으로 제품 품질 관리, 노동자 제안, 작업장 개선, 적시 생산방식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노조의 경영 참여 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나라 중에서도 노조의 경영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은 각 사업장 별로 노동자가 모두 참가하는 ‘사업장평의회’(서울시에서 논의되는 ‘경영협의회’와 비슷한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자가 2천 명 이상인 기업은 노사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를 구성해 ‘경영이사회’의 주요한 결정을 감독하도록 하는 ‘공동결정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경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독일에서조차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먼저, 사측은 사업장평의회와 경영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신기술 도입 등 노동조건 변화 사항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와 협의를 할 뿐 합의를 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결정을 번복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대기업의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 노사 양측이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감독이사회 의장은 사측 인물이 차지하도록 돼 있고, 노사 간에 동수로 맞설 때는 의장이 2표를 행사한다. 결국 감독이사회도 사측의 주요 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2000년대에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조건이 대폭 악화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다. 오늘날 독일 일자리의 거의 4분의 1이 저임금·시간제 일자리인 ‘미니잡(Mini job)’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 9면으로 이어짐

노동시장 구조개혁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성지현

박근혜 정부가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2015년에도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운용'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대체로 정규직 해고 완화(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퇴출기준 명시, 정리해고 요건 구체적 명시 등), 임금피크제, 직무·성과·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이 답길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낡은 노동시장 제도 개혁"을 말하면서 이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

직을 더 쉽게,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방안으로 가득 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상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까지 공격해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를 공격해 온 것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계획을 노사정위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안"으로 내놓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에 참가한 한국노총과 정부 사이에 이견으로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자 "사회 타협" 운운했던 정부는 "플랜B는 없다"며 독자적으로 정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재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애초부터 노사정위는 더러운 내용을 잘 포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규직을 공격해 전체 노동자의 조건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왜 밀어붙이나

정부가 필사적으로 노동자 공격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최근에 벌어진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은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미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일부 신흥국의 디폴트가 발생하면 1998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장기 침체, 높은 가계 부채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 둔화도 내년에 더욱 확인해질 가능성이 크다. KDI는 내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IMF가 제시한 세계경제 성장률

(3.8퍼센트)보다도 낮은 3.5퍼센트로 전망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저성장'의 늪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재벌들의 공간은 불었다. 2009년 2백88조 원이었던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5백22조 원으로 증가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등장 자체가 계속되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확고하게 전가해 자신들의 이윤을 보전하겠다는 지배계급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저들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잘 조직된 부문이 자신들의 조건을 방어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조건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올해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힘을 충분히 쓰지 못했다. 노조 상층 지도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을 모아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고, 전체의 노동자 계급의 이익보다는 개별 작업장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투쟁은 대개 개별 소송으로 한정됐고, 핵심 작업장인 현대·기아차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반발도 외면하고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내년 3월로 넘겼다. 공공부문 작업장들도 임금·복리후생을 대폭 삭감하는 '공공부문 정상화'에 맞서 공동 투쟁을 결의했지만, 결국 사업

장 별로 사측과 협상해 약간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일단락됐다.

노동운동 내에 적잖이 퍼져 있는 '정규직 이기주의' 논리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는 데 좋은 핑계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의 임금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투쟁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잘 조직된 부문의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공격에 맞서 자기 조건을 방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힘을 노동자 계급 전체의 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민주노총 직선제 1차 투표에서 "박근혜와 맞짱" 뜨겠다고 2015년 총파업을 강조한 한상균 후보조가 최다 득표를 한 것은, 현장 노동자 상당수가 박근혜 파상 공세에 맞서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한편, 이번 청와대 권력 암투가 보여 주듯이 박근혜 권력은 단단하지 않은 않다. 사실 박근혜는 올해에도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참사 항의 등 여러 번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분노에 직면했다.

중요한 것은 조직 노동운동의 태세다. 정부의 기간제와 파상 공세에 맞서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고 싸워야 한다.

▶ 8면에서 이어짐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22퍼센트로 급격히 늘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5호 기사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를 참고하시오.)

물론 독일 기업주의 상당수는 공동결정제조차 거추장스러워 한다. 노조와의 협의 과정이 '기업 의사결정을 늦춰 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꽤 많은 독일 기업주들은 공동결정제가 노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결정제가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 고양된 기업 내 평화, 노사 간 협력 및 신뢰관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정신을 해체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독일에서 2008년 노동자 1천 명당 파업 일수는 5.2일이었다.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이다.(2006~2008년 OECD 평균 34.7일)

이런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경영 참여가 가진 약점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노동자들이 설사 기업 경영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영 참여는 계급 협력 정치를 강화해 노동자를 분열시킨다.

기업이 아무리 '투명 경영'을 하더라도 시장 경쟁의 압력은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정리해고를 하도록 만든다. 이때 노동자 경영 참여는 일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른 노동자들이 승인하도록 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진보진영의 일부가 경영 참여에 관심이 높은 것은 노조 지도자들의 개혁주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자본가나 정부 같은 권력자들과의 협력에 매달렸다. 투쟁을 준비하지 않고

저임금 저질 일자리 확대와 외주화를 받아들였다.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었다.

이런 계급 협력 정치는 독일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약화시켜 왔다. 독일의 노조 조직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1991년에 노조원 수는 1천2백만 명에 육박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 말 현재 약 6백1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나 노조 지도부가 기업주(정부)와의 협상에 매달리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따라서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에 환상을 품지 말아야 한다.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독일의 미니잡 노조의 경영 참가는 이런 저질 일자리 확대를 막지 못했다.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는가?

근래 우리는 좌파의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며 노동자연대를 음해하는 일을 겪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일봉은 최근의 온라인 기사 ‘정치적 왕따 만들기는 좌파라면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수단이다’에서 왜 그런지를 다뤘다.

그는 이 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고, 마르크스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윤리’ 하면 흔히 추상적인 보편 윤리를 떠올린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는 바로 이 같은 도덕적 제약 조건들에 관한 것이다.

보편 윤리를 대표하는 이론인 칸트 윤리학의 대전제는 욕구와 의무의 이분법이다. 이에 따르면, 윤리는 욕구를 억제할 의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윤리는 다른 모든 근대 윤리와 마찬가지로, 이기적 개인들로 이뤄진 사회 속에서 공동선(공익)을 어떻게 명확히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변하려는 시도다.

이런 시도는 오늘날 다시 공명을 얻고 있는데, 주로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와 교육과 언론은 사람들에게 주로 소비자라는 자각을 심어 주려 하고, 성공한 인생을 많은 소비재를 살 능력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 탐욕이 미덕인 양 찬양·고무된다. 욕구 대(그것을 이겨 낼) 의무라는 이분법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다.

그러나 칸트 윤리학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윤리는 **계급투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저 욕구를 이겨 낼 의무라는 윤리 원칙만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나마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다소 변동될 수 있는 다소 유동적인 원칙이다.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구조주의는 이 유동성을 상대주의에 가깝게 증폭시킨다.

학교(칸트식) 윤리와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추상적 윤리를 설교하지 않는다. 특히 《독일 이데올로기》와 《고타 강령 비판》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도덕주의(훈계)를 싫어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효과들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의분(義憤)은, 직

접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정치적·경제적 저술들 곳곳에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윤리는 그들의 저작 속에 함축된 윤리적 코드를 풀어야 밝혀질 것이다.

윤리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로부터 발전해 나왔지만(아리스토텔레스), 인간 본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므로(마르크스), 윤리 관념과 규범은 **역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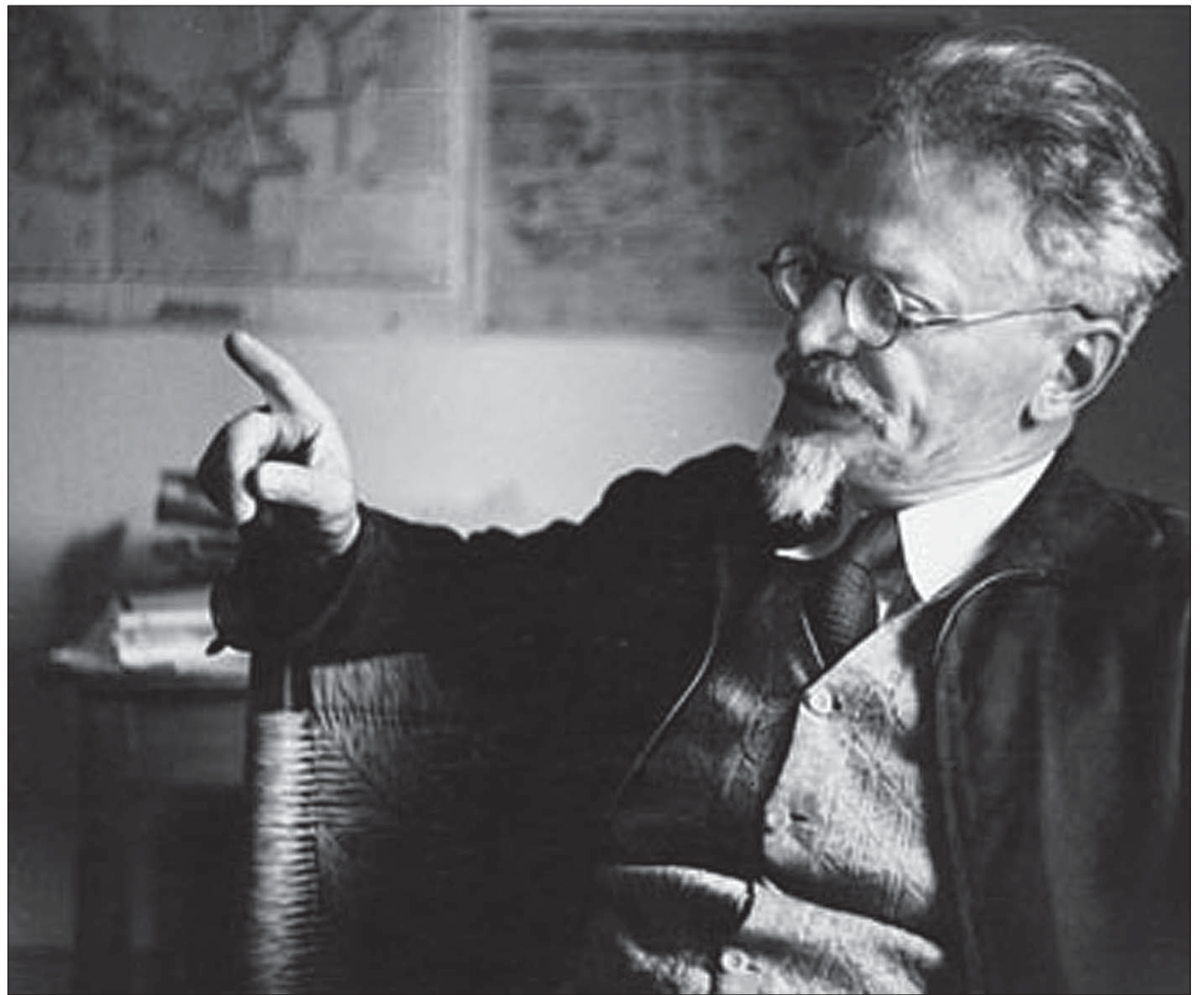
윤리 규범이 역사나 사회 바깥에서 생겨나지 않았으므로 윤리 규범은 사회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동성애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개 용인되지 않는다. 또, 고리대금업은 서양 중세 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인 행위였지만, 오늘날에는 금융 투자라며 장려된다.

윤리 규범은 또한 **계급이나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다. ‘대체인력’은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폭력과 거짓말은 잘못이지만, 지배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경찰의 파업 파괴와 집회 강제 해산은 폭력이 아니라 ‘공’권력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삭감 계획은 기만이 아니라 하나의 ‘개혁안’으로 진중하게 고려된다.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서 교전국 시민들과 병사들을 폭격하는 행위는 언론에서 살인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윤리 규범의 이러한 **구체적 맥락** 문제와 관련해 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주의자의 목적과 수단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추상적 윤리는 목적이 옳아도 수단은 수단대로 그 옳고 그름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목적과 수단 둘 다 옳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1879~1940) 《그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에서 마르크스주의 윤리에 대해 저술했다.

수단은 추구하는 목적을 미리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 윤리는 이상주의적이 된다.

이상주의 윤리는 일부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데, 이들은 좌파가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해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수단을 통해 변화시킨 사회는 전과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상주의 윤리는 비현실적이라는 명백한 난점이 있다. 예컨대 터무니없이 ‘종북’으로 몰려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숨겨 주고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날 경찰 상부로부터 지역 탐문수사를 지시받은 인근 파출소 경관이 간첩 신고를 명분으로 호별방문을 하다가 당신 집 문을 노크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혼자 사시냐고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하면서 집 안쪽을 살펴본다. 이때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거짓말하는 게 싫어 침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구체적 상황에서 묵비는 공연히 의심만 더 살 것이다.

트로츠키도 이상주의 윤리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든다.

“전쟁에서 아군의 ‘진실’을 적군에 폭로하는 군인은 스파이 행위로 처벌 받는다.

“파업 참가자들에 관한 ‘진실’을 사용자나 경찰에게 숨기지 않는 노동자는 경멸과 경원시를 당해도 썩 배신자일 뿐이다.

“독일 프롤레타리아가 히틀러의 경찰을 속이지 않아도 될까?

“스페인 내전 상황에서 파시즘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의 폭력에 관여하는 것만이 윤리적인 일이다.

“[민주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관계를 사례로 들어]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적 길을 통해 탄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혁명적 폭력, 심지어 공포를 통해 탄생했던 것이다.”(《그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 1938년.)

이상주의와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적 미래를 미리 구현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혁명이 계급 사회의 산물이고 따라서 그 흔적을 지

닌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실용주의자의 목적과 수단

이상주의 윤리와 대조되고 흔히 마르크스주의 윤리와 **혼동**되는 것이 실용주의 윤리다. 실용주의 윤리는 윤리 규범을 위한 준칙으로서 영구불변의 진리에 기대지 않고,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실용주의 윤리에서 행위자의 동기와 의도(선의나 악의나)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결과**나 효과, 영향이 중요하다.(아래에서 보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는 둘을 분리시키지 않고 둘을 잇는 끈을 제시한다.)

그래서 실용주의 윤리는 목적이든 수단이든 양심이나 윤리 관념, 영원한 진리 따위로 정당화될 수 없고 오직 실제 결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수단의 좋고 나쁨은 오직 그 실효(實效)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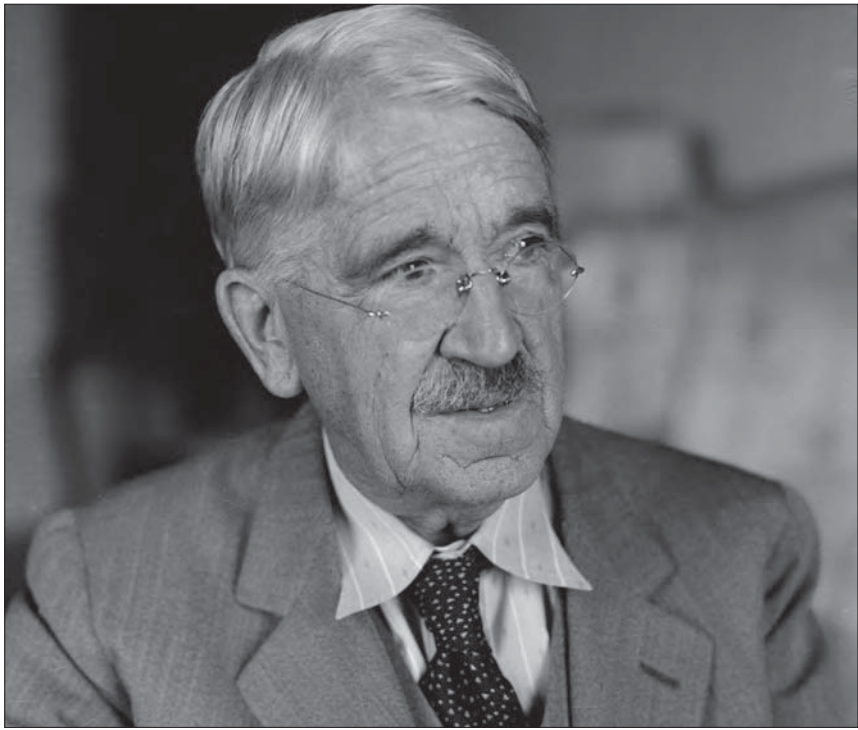
그래서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는 착취가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생산물 일부를 탈취하고,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므로 그릇된 일이라고 봤다. 또,

맑시즘2015
MARXISM
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2015년부터 맑시즘을 거울에 개최합니다.
15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2015년 2월 6일(금)~8일(일)
장소 : 서울 | 주최 : 노동자연대

www.MARXISM.or.kr
02-2271-2395 | 010-4909-2026(문자 가능) | marxism@marxism.or.kr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

폭력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결과가 유익하지 않고 유해하므로 나쁘다고 봤다.

하지만 결과에 관심을 집중시키느라 폭력의 원인이 착취와 이를 위한 억압이고, 착취의 원인이 자본 간 경쟁이라는 점을 놓치면, 착취와 폭력 비판은 추상적인 훈계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주의적 설교는 폭력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유물론적** 인식과 **진정한** 해결책 발견을 방해한다.

실용주의 윤리에 근거한 듀이의 폭력 비판, 혁명 비판에 맞서 트로츠키는 노동자 계급 혁명이라는 ‘폭력(수단)’ 말고는 거짓과 폭력이 필요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목적)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다(앞서 언급된 책).

실용주의 윤리는 또한 **목적과 수단을 분리시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가 말했듯이, “목적과 수단의 기계적 분리는 인간 해방이 아니라 인간 조종에 적합하다.”(‘이성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1960년). 그래서 미래의 이상향을 제시하며 현재의 야만 상태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옛 소련 체제와 현 북한 체제를 합리화하(했)고, 자유주의자들과 주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와 그것의 단편적 개혁을 합리화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목적과 수단

지금까지 봤듯이, 언제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실용주의)도 아니고, 언제나 목적과 수단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상주의)도 아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자가 사용해도 되는 수단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수단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수단이 허용되고 어떤 수단이 불허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달리 말해, 똑같은 행위(또한 행위자)에 대한 모순된 판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윤리 규범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자는 판단을 그저 양심에 맡길 수 없다. 양심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혼동해 온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뭔가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그런 근거가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즉 노동자 계급 자기해방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노동자들이 그들의 필요(임금 인상, 노동조건과 생활조건 개선)를 위해 싸우면,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도 그

들이 필요로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된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으로 나타날 노동자 연대가 노동자들의 필요이자 욕구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 투쟁에 참가하면서 노동자 연대를 위해 애쓰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운동가들은 그 속에서 필요에 따른 삶과 가치에 따른 삶의 통일을 느낄 수 있고, 필요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즉, 소외)의 극복을 위해 조직할 줄도 알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선악(善惡)과 정사(正邪)를 구별할 확고한 근거와 개인 행동의 판단 기준도 세울 수 있다. 특히, 개인주의가 어떤 경우는 유쾌한 개성만적인 반면 어떤 경우는 단체 활동 혼란이나 투쟁 교란의 원인인지를 배워갈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형성되는 윤리, 즉 마르크스주의 윤리는 노동자 계급의 필요와 투쟁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내재적’이고, 노동자와 인류의 현재 삶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다는 점에서 ‘초월적’이다. 또한 이런 과정은 괴리됐던 ‘존재’와 ‘당위’가 통일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컨대 노동자 계급 자기해방 투쟁이야말로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수단을 연결시키는 확고한 끈이 될 수 있다. 이상주의에도 실용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해 주는 지침 말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는 수단(가령 중상모략과 음해 등)은 비윤리적이라고 트로츠키는 강조한다.

“어떤 수단들이 허용되고 의무적이나 하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결속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차별에 대한 화해 불가능한 적대로 채우고, ... 그들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의식으로 채우고, 그들의 용기와 자기희생 정신을 북돋는 수단들, 오직 그런 수단들만이 허용되며 의무적이다.

“바로 이로부터 모든 수단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도출된다. ... 혁명의 위대한 목적은 노동자 계급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서로 반목케 하거나 ... 대중이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대해 갖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비열한 수단과 방법은 거부한다.”(위에서 언급된 책)

노동자 계급 자기해방과 이를 위한 노동자 연대. 바로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에게 각각 목적과 수단인 것이다. 물론 노동자 연대는 당면한 구체적 상황들 속에서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 자기해방은 인류 해방이라는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수단인 것이다.

현대중공업 투쟁

승리를 위해 파업의 수위를 높이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12월 17일 7시간 동안 3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동자 수천 명이 공장 안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투지를 보여 줬다.

“벌써 연말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싸운 게 아까워서라도 투쟁을 쉽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투지의 배경에는 그동안 억눌려 온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통이 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투잡하고 맞벌이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위험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3년차인 제] 월급이 1백 몇 십만 원 수준밖에 안 돼요. 너무 부당해요.”

지금 노동자들은 임금 대폭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양보는커녕 ‘파업 참가자는 임금이 깎이고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도 질 것이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노동자들 간 경쟁을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게 도입하려고 한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측이 생산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공격할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공격의 배경에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조선업 위기가 있다. 그렇다고 사측 말처럼, 사측이 ‘여력이 없어서’ 싸워도 소용없는 건 아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도 노동자들은 싸

워서 이길 수 있다. 다만 사측의 양보를 강제하려면 더욱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

실질적인 파업

우선 노조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아쉽게도 매주 하던 파업을 이번에는 2주 만에 했다. 집중 교섭을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투쟁이 이완되는 것은 현장의 세력 관계와 노동자들의 투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사측이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이다. 한 노동자는 “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늘었어요” 하고 걱정했다.

또한, 이는 사측에게 ‘교섭할 기회’가 아니라, 전열을 정비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다. 지난 11월 7일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자마자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을 멈춰 사측에게 타격을 주는 실질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이번 부분파업으로 상대적으로 사내하청이 적은 건설장비 공장 은 대부분 멈추긴 했다. 그러나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다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거의 모든 공장이 가동됐다. 이것은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생산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1987년 대투쟁 때처럼 파업 대오가 현장 구축구석을 돌면서 파업 동참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사측도 이런 일이 두렵기 때문에 ‘작업장 진입, 출입문 봉쇄,

사내 도로 점거’ 등이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파업은 파업 참가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아직 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함께 투쟁해서 다 같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두 배나 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시켜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고나 임금 삭감 같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을 정규직 노조가 대변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국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한 훌륭한 전통이 있다. 1960년대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해 승리했다. 서슬 퍼런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는 데도 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1987년 대투쟁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워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이 됐다.

반면 2011년 한진중공업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싸울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해서 투쟁에 큰 어려움을 낳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 당할 때 정규직 노조가 방어하지 않은 결과였다.

이런 교훈들을 곱씹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힘이 커지고, 사측의 공격을 막아내고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

김지태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 · 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